

# “우리도 할 수 있다”

## 基礎科學 振興의 戰略的 方案

趙 完 圭 (理博·서울大教授)

- …本 論稿는 지난 10월31일 서울大學校自然科學綜合研究所주최 「第一回全國基礎科學研究…□
- …所 研究發表會」 開會式에서 행한 「우리나라 基礎科學振興의 戰略的 方案」 題下의 基調…□
- …演說 내용을 담은 것이다. ……………□

### ㉠ 포기냐, 再起냐! /

지난 3월에 회의가 있어서 이집트의 카이로에 들른 일이 있었다. 이집트는 우리나라와 정상 외교 관계가 없고 대신 북한과는 大使館을 교환하고 있는 나라이다.

시내를 지나다 앞을 달리는 낮익은 차에 눈길이 갔다. 그 차는 “Hyundai” Pony의 최불이 마야카가 뚜렷한 國產車이고 각종 형태의 차들과 더불어 시내를 질주하고 있었다. 먼 아프리카까지 와서 「포니」를 볼 것이라고는 거의 예상치 못했던 때문에 그 감명도 클 수 밖에 없었다.

그곳 호텔, 병원등 건물 뿐 아니라 정유소와 수력발전을 위한 특수 시설의 用役을 맡아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호 못했다.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우리들의 기술이 크게 신장했고 国力도 그만큼 자란 것이다.

얼마전에 永東의 綜合展示場에 전시중에 있는 컬러TV셀, 오디오 컴퍼넌트, 카세트이프 녹음기등을 볼 기회가 있었다. 그들 제품들이 하도 정교하고 우수해서 국제시장에 내 놓아도 과히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을 가질수 있었다. 그동안 큰 동란을 겪고 복귀할 시간도 녀겨지 못한 어려운 여건인데도 이룩해 놓은 발전상은 눈부실만 하다고 느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비친 “일본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게 되었다. 과학과 기술이 가장 으

뜸가는 나라라고 자부해온 미국이 “킴프렉스”에 빠질만큼 오늘날의 日本産業技術은 가히 세계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이 그 동안 성취한 성과는 경이할만 했고 큰 충격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筆者는 크게 발달한 우리나라의 기계공업과 전자공업의 대부분이, 실은 외국의 기술과 모방을 바탕으로 해서 된 것일뿐, 아직도 그 길이 요원함에도 일반국민이나 정부가 마치 우리의 과학 기술이 국제수준에 이른 것처럼 착각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우리는 지난 수 10년 일본으로 부터 갖은 수모를 받아 오면서 그 치욕과 굴욕스러움을 참고 견디어 가면서 살아왔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항시 그 일본을 우리의 숙명적인 경쟁상대로 의식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그러한 일본이 우리를 크게 앞질러서 그 처럼 눈부신 발달을 이룰 수 있었던 근원을 알아보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이해하게 된다.

그들은 그동안 우리보다 훨씬 우월한 研究人力, 資金 그리고 研究環境등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이는 일본의 막강한 研究能力을 보고 좌절하거나 또는 도저히 그 격차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본과의 경쟁을 포기하거나 체념해 버리려고 한다.

뒤 늦게 눈을 뜬 중공은 科學의 育成만이 그 나라 現代化를 이룩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근래에 수 천명씩 젊은 科學者를 미국, 일본, 구라파의 여러나라에 유학보내고 있다.

그들의 熱과 투자를 감안할 때 가까운 장래에 科學의 수준이 우리의 것보다 훨씬 앞 서지나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도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그래서 치욕과 굴욕을 또다시 다음 世代에 넘겨 줄 못 난 조상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슬기로웠던 옛 조상들의 얼을 재현하여 영광된 유산을 넘겨 줄 수 있는 자랑스런 조상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중 하나를 택해야 할 지극히 절박한 時點에 있다. 물론 대답은 자명하다. 즉 우리처럼 불행했던 삶은 우리 世代에서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견주어 그 환경과 여건이 극히 불리한 우리지만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科學수준의 격차를 어떻게 해서라도 좁혀야만 한다. 결국 우리는 선진국이 해온 그 방법이 아니라 그 보다 비상한 다른 방안을 찾아내어야 한다. 이 때문에 筆者는 “.....의 전략적 방안”이라는 論題를 가지고 여러 讀者들의 共感을 얻고 싶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의 개선을 위해서 비상한 수단을 부림으로 해서 비로소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筆者는 그와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들의 자세를 다짐하면서 과학 육성의 기틀 조성에 一助가

되길 바란다.

### ㉔ 놀려 두었던 大學의 힘과 새 헌법

우리나라의 통계자료를 보면 理工분야의 연구투자액과 人力이 先進國에 비해서 크게 빈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도표 1 (1977년)은 우리나라의 이공분야 연구자의 수가 人口 만명당 3명 꼴이 되지만 다른 선진국은 우리의 5배(서독), 또는 9배(미국)에 이르고 있다. 일본만해도 우리의 8배가 된다. 1인당 연간 평균 연구비가 1.7만불인 우리에게 비해서 선진국들은 3배에서 8배에 이르고 있다. 가령 연구자수×년간 1인당 연구비를 상대적인 연구잠재력이라고 할 때 우리의 값은 0.5인데 일본은 우리의 24배, 서독은 40여배가 되므로 우리가 얼마나 열등한 위치에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연구분위기, 지원체제, 환경등을 숫자로 표시하고 이를 연구잠재력에 산입한다면 우리와 그 밖의 나라와의 격차는 더 심하게 벌어질 것이다.

도표 2

1977년도 분야별 연구개발비 현황

분 야	연구개발비 (억원)	
기 초 과학	23.7	2.1 %
농 학	197.0	17.7
공 학	391.0	35.2
의 학	28.0	2.5
기 타	471.0	42.4
계	1110.7	

선진국 연구개발비중 기초과학 비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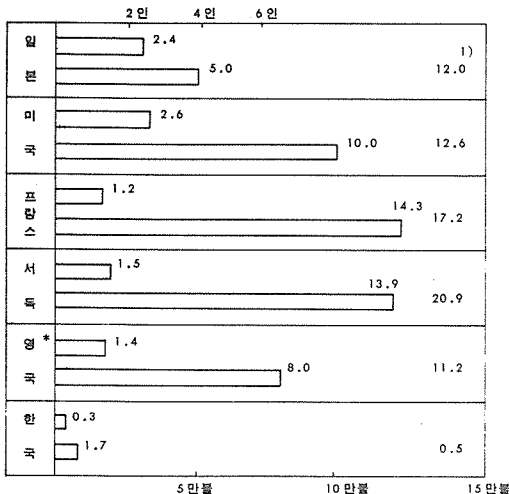
미 국	영 국 <sup>2)</sup>	서 독	프랑스	일 본
12.8	7.9	23.0	19.6	14.0

<sup>1)</sup> 최근 2~3년간의 평균

<sup>2)</sup> 대학등 비영리 기관 제외

도표 1

이공분야 연구자수(인구 1,000명당) 및 1인당연구비(1977)



\*영국: 산업 및 정부 부문의 자료 (대학등 비영리연구기관자료는 제외)

1) 상대적 연구잠재력: 연구자수×1인당연구비

도표 2에는 1977년 우리 나라가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분야와 투자량을 표시했다. 연구개발비 1,000억중 農·工에 50%, 기초과학에는 단지 2%만이 배당되었다. 선진국이 우리의 7~10배가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기초과학이 얼마나 천대를 받았고, 비참한 지경이었는데를 짐

작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가 1977년에 消費한 理工系분야의 연구개발비의 행방을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연구수행능력과 독창성은 상급학위소유자일수록 우월하다. 박사학위소지자가 절대다수인 大学은 항상 막강한 연구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先進国들은 각종 연구소를 大学에 설치하고 그 인력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표 3

이공계 연구종사자 학위현황과 연구개발비현황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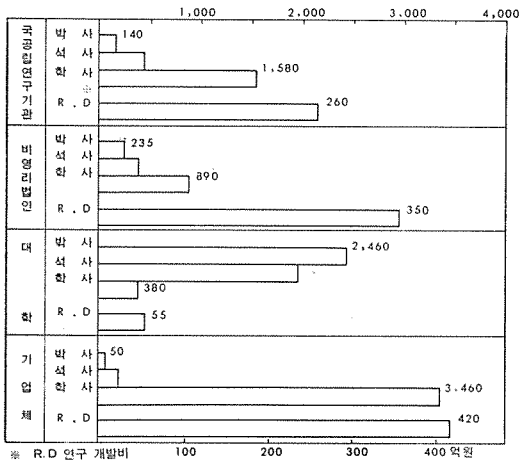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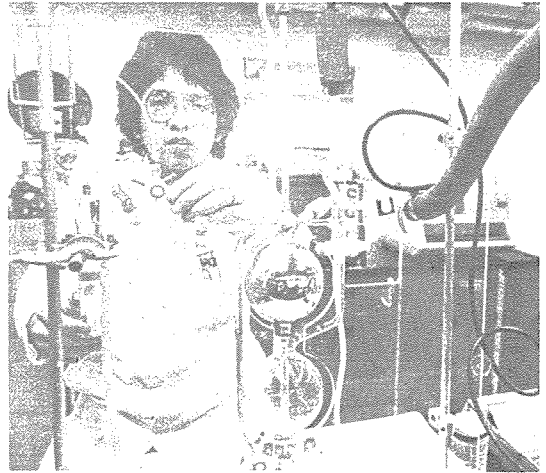


도표 3에 의하면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기관등은 연구종사자 50%이상이 학사학위만을 소유하고 있고 기업체인 경우는 전체 연구종사자 3,700명 가운데 박사학위소지자가 단지 50명 뿐이다. 한편 大学은 理工系 教授要員 4,800명 가운데 50%인 2,400여명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이공계 연구업체에 종사하는 박사학위소지자 2,900명의 80%인 2,400여명을 大学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大学이 막강한 연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大学이 연간 소비한 연구비는 전체 연구개발비 1,100억의 고작 5%인 55억에 이르지 못하였다. 즉 박사 1인이 년간에 소비한 연구비가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약 1억 9천만원, 비영리법인연구기관에서는 1억 5천만원, 기업체에서는 물경 8억 4천만원이 되지만 大学에서는 단지 220만원이라는 참담할 정도의 보잘 것 없는 액수가 된다.

그동안 막대한 연구잠재력이 담긴 보물단지를 그대로 놓려둔 셈이 되는 것이다.



위의 여러가지 자료나 통계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행해 온 연구투자의 방향설정이나 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졌다.

앞으로는 大学이 지니고 있는 막대한 研究잠재력을 活用할 수 있게 政策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엔 새 헌법을 갖게 되었다. 그 헌법의 제128조에 다음과 같은 조문이 담겨있다.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고 과학기술을 창달·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관을 둘수 있다

즉 새 헌법에 국가는 科学技術의 창달과 진흥을 위한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즉 科学·技術의 창달과 진흥에 저해가 되는 각종 법령, 규정 그리고 행위는 違憲이 된다는 뜻도 함유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는 科学·技術의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와 연구활동을 지원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근래에 정부에서도 科学研究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79년부터 12개 大学에 특성화분야를 육성할 목적으로 基礎科學研究所를 설치하게 하였고 연구비지원을 시작하였다. 특히 대통령의 내년도 시정방침에 理工系 大学의 육성이 포함된 것등은 우리를 고무시키기에 충분하다. 밝은 내일이 기필코 올 것이라고 내다 보면서 우리나라 科学의 힘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체제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③ 오직 이 길만이

앞서 우리는 우리 과학의 實相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 모두 비상한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는 그 힘의 신장을 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비상한 방안은 아래와 같은 몇가지 요인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첫째, 우리에게 연구 人力, 資金, 時間, 空間에 많은 제한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여야 한다.

둘째,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요인들(법, 규정, 행위 등)을 개선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大学院教育에의 참여를 配慮하여야 한다.

넷째, 應用科學분야와 협력하고 연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그러면서도 우리는 첫째가는 목표를 국제경쟁력의 배양에 두어야 한다.

연구활동의 결과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얻기 위해서는 바로 연구인력(연구원, 조원, 기술요원)의 확보, 자금(시설, 운용, 연구활동비등)의 원활한 공급, 그리고 연구활동을 지원해 줄 체제(정부의 체제, 법적·행정적 지원체제등)의 확립이라는 3가지 요인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방안이 도출되어 나와야 한다.

### 1) 대통령 밑에 자문기관을

우리나라에서 科學技術처가 출범한 것은 1960년대 초이다. 과학기술의 체계적인 육성, 창달,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그 곳 업무일 것이다. 그 당시 정부가 과학기술이 우리나라 근대화에 불가결한 것이라고 인식한 것은 늦은 감은 있었으나 그동안의 발전을 이루게 한 계기가 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남의 技術

을 도입하고 모방하는데에만 주력한 까닭에 참된 科學이 끼어들 틈이 크게 제약받아 온 것은 유감이었다. 그러한 政策탓에 科學의 힘을 축적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이 때문에 급증하는 科學人力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人力의 수요를 계산하는 科學技術과 이를 양성해서 공급해야 하는 文敎部가 서로 協議하거나 調整함이 없이 독자적으로 통계 숫자를 낸 것 같은 인상이라 이런 점은 政策不在라 출멸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一貫性 있는 科學 技術의 教育, 振興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고 수시로 科學 및 技術에 관해서 의견을 상신할 수 있게 대통령 아래에 「科學·技術諮問委員會」 또는 「科學技術擔當 特別補佐官」 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새 헌법에 그 근거를 둔 이상 즉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가능하면 大統領 비서실직제에도 「科學담당」이 생겨서 科學敎育과 研究 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2) 고질법의 개선

연구활동이 사람과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이미 밝혔다. 마음의 부담없이, 그리고 의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체제와 환경이 고쳐져야 한다. 선진국들이 한결같이 연구할 수 있는 풍토가 진실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찾아본 사람이라면 쉽게 알게 된다. 특히 그들 정부나 행정요원들은 그들 자신의 상식에 의해서 연구하는 사람을 지원할 뿐 까다로운 法條文을 따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傳統이나 慣習이 없고 상식이란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깨알같은 法條文만을 들추어, 따지기 좋아하는데서는 연구하는 사람을 지원하기는 고사하고 규제가 많아서 연구의욕 상실이라는 逆機能的 行태가 나타나기 쉽다. 이제는 우리도 憲法에 明示된 趣旨에 따라 연구요원의 의욕을 키워 주고 알찬 연구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저해적 요인이 내포된 法令을 과감히 고쳐야 할 것이다.

그사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긴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關稅法」이나 「予算會計法」등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큰 敵이 되어 왔고 실지로 연구에 종사해 온 사람이 아니면 그 법들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혀 왔는가를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순수 試藥을 만드는 공장이나, 정밀 연구용기기를 제작하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연구용자재를 수입상에서 원가의 5~10배를 주고 구입하여야 한다. 동일한 연구課題면 우리는 미

국학자보다도 5~10배의 연구비가 더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보잘것 없는 액수의 연구비를 받는 우리에 젊은 科學者들이 간혹 외국의 친구로부터 구걸해서 얻어오는 試藥등이 영낙없이 우리의 영리한 세관원의 손에 걸리게 되고 내세우는 法으로 곤욕을 치른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만 구입이 가능한 연구용 기기를 받아 쥔 연구하는 사람은 그 성능이나 취향은 아랑곳 없이 싼 값만을 자랑삼는 당국자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前近代의인 관세법이나 예산회계법 또는 무역법등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데 우리나라 科學이 뻘어나가지 못한 또 한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해서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한 고질적인 법을 현대적인 것으로 고침으로 해서 科學振興의 속도는 加速化할 것이 분명하다.

이 밖에 용이하게 외화를 이용하여서 도서나 시약등을 발주할 수 있도록 「외환관리법」을 손질해야 하고 助教나 技術職人員의 定員을 확보할 뿐 아니라 技術職人員의 積급, 특별대우를 할 수 있도록 「公務員定員令」이나 「教育公務員法」을 보완해야만 한다. 일본의 경우 이공계 大學에서는 教授 2인당 1인의 技術職要員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大學은 그 수가 극히 드물다. 앞으로도 研究用 또는 教育用 기자재가 차관에 의해서 導入될 것이 예상되지만 이를 운용하고 수선하기 위한 적절한 수와 대우가 따르는 技術職要員의 확보없이는 또 되풀이되는 國庫낭비의 염려가 크다.

과학의 진흥을 위해서 이미 우리는 「科學·技術振興法」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科學財團」이 設立되었고 벌써부터 理工系大學의 教授중 상당수가 研究 지원을 받고 있다. 작년에는 「學術振興法」이 마련되었고 「學術振興財團」도 발족단계에 있다. 이러한 法들이 제대로 발동될 때, 學者들의 研究활동을 보다 더 효과 있게 지원해 주게 되리라고 믿는다. 다만 科學財團이나 學術振興財團은 그 基金의 확충을 위해서 진력해 주어야 할 것이고, 學者의 研究와 教育을 뒷받침해 주는데 필요한 체제마련에 정진해 주길 바란다. 우리 교수들은 學術振興財團이 내걸고 있는 事業에 기대하면서 그들의 소박한 꿈을 그것에 싣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政府 주도의 財團 뿐 아니라, 民間들도 財團을 설립하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고 그들 자체가 研究所를 설치 운영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3) 기초과학자 : 우리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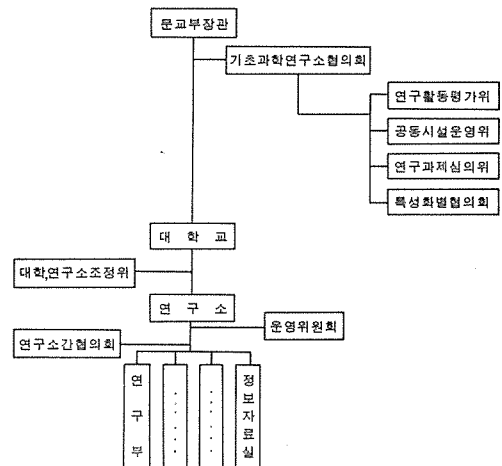
도표3에서 본 것 처럼 大學은 막대한 연구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전공들이 서로 相接해 있고 大學院學生들을 연구과제에 참여시킬 수 있는 등 그 환경으로 보아 大學은 연구수행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기관이다. 그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에 大學에 각종의 基礎學問研究所를 부설하고 있는 것이다.

1979년 부터 政府에서는 전국 國立大學校와 몇 개 私立大學校에 基礎科學研究所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중 서울大學校에는 「自然科學綜合研究所」를 그 밖의 大學들은 特性化分野를 연구하도록 特性化研究所를 두게 했다. 이들 연구소에 연구비를 배정하여 연구지원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우리 科學者를 크게 고무시켜주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형편에 불리한 점이 많지만 그러한 여건을 극복하여 효율적인 연구사업을 뒷받침해 주기위해서 도표4와 같은 체제가 바람직하다. 즉 文敎部長官을 자문하기위해서 그 밑에 專攻教授들로 구성된 「基礎科學研究協議會」를 두고 이 협의회는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비의 배정, 연구활동의 평가, 共用器機의 運用, 그리고 國際學術活動의 계획등을 다루게 한다. 각 大學은 研究所사이에 大學院教育과 共同研究 課題의 導出 및 調整을 위해서 「協議會」를 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特性化研究所끼리 또는 綜合研究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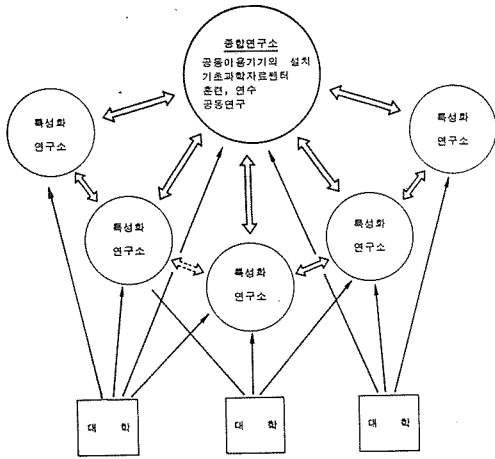
도표4-1

기초과학연구소 체제



- 연구진담교수의 확보
- 연구활동의 엄정한 평가 및 포상제도 수립
- 불실한 연구소 및 연구분야의 폐색

도표4-2



- 동일 인접분야 특성화 연구소간의 협의체 구성
- 공동연구체제의 구축
- 공동과학 연구소와의 협의체제 구축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專攻科學者의 층이 극히 얇아서 연구과제는 전국적인 규모에서 도출되어야 하고 선정된 과제에 최적의 학자들을 참여시키는 공동 연구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筆者는 우리 스스로가 다짐해야 할 두가지를 제언하여 관련된 여러분의 同感을 얻고자 한다.

첫째, 우리의 연구사업은 공정하고 철저한 評價를 받아야 하고 그 結果에 따라 연구소 또는 연구분야의 量을 增大시키거나 감축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오늘의 이 같은 意慾인 사업의 勝敗는 바로 우리의 評價事業의 공정성과 그 결과에 따른 措置에 달려 있다. 앞으로 5년 내에 우리는 기필코 대학 기초과학 연구소의 기틀이 잡히도록 힘써야 하며 그 뒤 綜合的 評價에 의한 심판을 견뎌야 할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그 때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손을 떼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無能하고 再起不能의 汚辱을 후세에 남길 뿐이다.

둘째, 전국 각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들은 그 대학의 것이 아니라 國家가 맡겨 놓은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즉 그 연구소는 그 대학의 教授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대학의 것이다. 課題의 도출이나 研究參與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행해져야만 한다. 가령 서울대학교에 있는 綜合研究所는 전국 대학의 모든 專攻學者를 겨냥하여 課題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 高價이고 使用빈도가 낮지만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할 研究用器機라면 그것은 일

단 綜合研究所에 설치해야하고 綜合研究所는 全國大學教授에게 利用토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각 연구소가 폐쇄적이지 않고 공개적일 때 우리의 잠재능력을 개발, 발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4) 종합연구소가 해야 할 일

우선 우리나라에 1개의 綜合研究所를 두되 장차 점차적으로 研究員 또는 教授의 수요에 따라, 그리고 研究能力이 신장함에 따라 嶺·湖南에 각각 1개씩의 綜合研究所를 추가 설치해서 그 地域 研究의 中心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綜合研究所는 그 자체의 研究活動을 수행함은 물론 共同연구기기의 센터를 운영해야하고, 기초과학 관계자료센터의 운영과 각 특성화 연구소에 적절한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또한 특성화연구소와 협의, 자문, 연구사업지원 혹은 전국 大學教授 또는 研究要員의 훈련, 연수를 이행해야하며 각종 국제학술회의의 주최·주선등 일을 맡아서 名實상부한 연구소의 中核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 맺는 말

우리는 80年代를 맞으면서 새 時代에 대비한 産業發展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오늘 날까지 展開해 온 科學技術政策이 重化學育成 一辺到였던 탓으로, 근래에 급증하는 基礎科學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

우리는 어려운 갖가지 여건아래 있지만, 政府, 科學者(大學教授, 研究要員등) 등이 빛나는 文化를 창조했던 옛 조상의 얼을 이어 「科學韓國」의 再建을 위해서 분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研究활동에 저해되는 요인들을 과감히 수술해서 제거해야 하고, 막강한 연구잠재력과 유리한 연구환경을 가지고 있는 大學에 基礎科學을 專担, 연구하는 研究所를 설립, 효율적으로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각종 大學의 研究所에서 研究에 從事하는 學者는 우리나라 現代化를 기필코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歷史的 召命임을 인식하고 분발쇄신하여 우리가 가진 能力의 集大化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럴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빛난 유산을 다음 세대에 넘겨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본인의 강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李奎浩 文敎部長 官등 來賓에게 감사드립니다.